"자광 앞에서는 법 · 원칙도 무력한가?"

진보당 도당, 도 대한방직 부지 관련 도유지 매각 추진 절차 중단 요구… "도의회, 매각 안건 부결해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자치도의 대한방직 부지 관련 도유지 매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전권희)은 1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자광에 대한 도유지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의회는 특혜 들러리가 되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순창군수 출마예정자인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도당위원장이 함께했다.

진보당은 "시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지방정부가 자금력과 사업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기업 '자광'을 위해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오히려 특혜 행정의 끝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광이 대주단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EOD) 통보를 받고 PF 자금 조달도 불투명한 상황이며, 대한방직 부지 관련 세금과 임대료 등 약 11억 원을 체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런 기업에 6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맡기는 것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도는 도유재산 사용료조차 납부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약 200억원 규모의 도유지 매각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했다"며 "일반 시민에게는 소액의 변상금까지 완납해야 매각이 가능한데, 수억 원을 체납한 기업에는 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자광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절차 즉각 중단 및 체납 사용료 강제 회수 △전북도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안건 부결 △전주시와 전북도의 특혜 행정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대한방직 부지가 특정 기업의 투기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노후도심 새 아파트 공급 후보지 공모

국토부, 오늘부터… 하반기 추가 공모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11일부터 실시하며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아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 절차에는 2021~2023년에 선정된 기존 서울 내 후보지들과 달리 주민도 직접 제안하는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노후도·면적 등 하단의 사업유형별 지정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국토교통부 누리집(www.mdit. go.kr)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자치구는 주민들이 제출한 후보지와 자치구 자체 판단하에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한 후보지에 대해 주민 참여 의향률, 주변 지역 개발현황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천된 후보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후보지 공모에 대해 주민들과 자치구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4일, 31일 2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및 공모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더해 최근 사업 승인 및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지의 주민대표가 직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관점에서 도심복합 사업의 장점을 소개하는 시간도 예정되어 있다.

신규 후보지 공모와 더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깨끗한 선거로 평가받겠다"

'부안군수 출마' 김정기 도의원

부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정기 전북도의원이 10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수 선거 출마 배경과 당내 평가 논란, 향후 선거 전략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부안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부안군수 선거에서는 네거티브가 아닌 깨끗한 선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에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자신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 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온 만큼 이를 두고 따지거나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며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의회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온 것은 솔직히 속상하다"며 "출석률은 사실상 100%에 가깝고 5분 발언과 도정 질의, 조례 발의 등 의정활동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의원 평가 구조를 보면 지역 대의원들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정치 구조상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지만 결과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안군수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현재 현직 군수를 포함해 여러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에서는 변화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다"며 "특히 결선투표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지켜봐 준 언론인과 지역 주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하며 부안의 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

전북 타운홀 미팅 의제, 정책으로 구체화

국주영은 전주시장 예비후보

국주영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전북 타운홀 미팅 의제를 전주시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전주 10대 실행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실행 의지를 밝혔다.

국주영은 예비후보는 10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약속을 전주의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10대 공약은 정부 주요 부처 정책과 연계해 마련된 실천 중심 로드맵으로 구성됐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수소 시내버스 확대와 정비센터 구축을 통한 '수소 모빌리티 선도 도시 전주' 조성 △첨단산단과 탄소기술을 결합한 로봇·AI 산업 수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전주를 로봇·AI 산업의 핵심 배후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책과 연계한 공약으로는 △제2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제3 금융중심지 도약 △광역철도 동산역 연결을 통한 혁신도시·한옥마을·완주산단 교통망 구축 △전북형 광역 BRT 3개 노선 구축을 통한 도내 14개 시군 1시간 생활권 실현 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교통·재난 예측 대응 기능을 갖춘 AI 스마트시티 전주 조성 △국가 AI 핵심기관(전략위원회·정책센터·안전연구소) 전주 유치 △데이터 수집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AI 데이터 기본소득' 모델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K-미식 관광 정책과 연계해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K-미식 관광 수도 전주' 조성을 추진하고, 기후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햇빛소득마을 35개 조성을 통한 시민 햇빛연금 지급 등 에너지 복지 실현 구상도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업예산 30% 확대 · 114 프로젝트 추진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

김진명 임실군수 예비후보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임실 농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임실의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며 "돈 버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 제 농업 정책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솟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농가 소득은 줄고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며 농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업 예산을 30% 확대하고 '살기 좋은 임실 114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14 프로젝트'는 연 농가 소득 1억원과 농가 1,000가구를 4년 이내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정책이다.

또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보조금 사업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형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농업장비 보조사업 역시 50% 수준으로 지원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항공방제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해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업에 희망을 드리고 싶다"며 "임실 농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민이 잘사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꼭 기회를 달라. 정말 일하고 싶다"며 간절하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김진명 예비후보는 제7·8대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전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소설가로도 활동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노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임실=진홍영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박정희 군산시장 예비후보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을 사직하고 군산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박정희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

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이날 오후 2시 군산시 나운동 공단대로 410 르노삼성 2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 측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은 박정희가 한다"며 "다시 당당한 군산의 출발을 위한 첫걸음에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희 예비후보는 군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뒤 전북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완주군의회, 비법정 도로
양성화 등 건의안 채택

완주군의회는 10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법정 도로 양성화 및 공공도로 편입·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사실상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법정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비법정 도로는 주민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의안에는 △비법정 도로 정비 및 공공 편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편입 및 정비 비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전문기관의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 및 관리 표준모델 구축 △도시재생 등 국가 공모사업과 연계한 비법정 도로 정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완주=염재복 기자

6월 지방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살고 싶고 돌아오는 임실"

한병락 민주 도당 부위원장, 임실군수 '출사표'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임실군수 선거에 나서는 한병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임실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병락 출마자는 이날 "지난 14년 동안 임실의 미래를 준비해왔다"며 "이제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으로, 구상이 아니라 책임으로 임실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출마자는 "임실을 생산 중심 농촌을 넘어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임실, 함께 잘 사는 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임실 군정의 방향으로 △경청하는 현장 군정 △군민 경제를 살리는 군정 △문제를 해결하는 군정 △군이 기반을 만들고 군민이 성장하는 군정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군정 등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한 출마자는 "군정의 출발점은 책상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현장이 돼야 한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이 되고 과정과 결과까지 함께 점검하는 군민 중심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실에 살면 삶이 안정되고 군민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 지역에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생산·유통·경영·소비 등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경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이 지역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과 청년, 지역기업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역경제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임실이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돌아오는 지역이 되도록 의료와 주거, 생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민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획기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월 10만~30만원 단계적 거주수당 지급 △농가 수익구조 혁신 전략 추진 △청년창업 100개 브랜드 육성 및 혁신 기업 유치 △옥정호 순환도로 완공을 통한 임실 제2 성장축 구축 △살고 싶은 정주 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 · 임실=진홍영기자

"정읍 몫 챙기기 위해 더 넓은 무대로"

고경윤 정읍시의원, 도의원 도전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정읍시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10일 지지자들 50여명과 함께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회 제8대 부의장, 제9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덕분에 지방행정을 이해하고, 집행부와 상생하고 견제하며 민생을 챙기는 법을 배웠다."며 "기초지자체의 한정된 재정으로는 우리 정읍의 숙원사업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 전북도에서 직접 정읍의 몫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고 의원은 핵심공약으로 정읍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의 메카 완성, 지속가능한 농생명 산업의 허브 도약, 빈틈없는 정주 환경 구축, 정읍형 농촌 복지 모델 조성, 역세권 상권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정읍시 나선거구가 지역구인 고 의원은 정읍시의회 제 7~9대 의원을 지냈으며 "변화의 중심에서 정읍의 몫을 확실히 챙기고, 시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